



석유세미나 종합토론 (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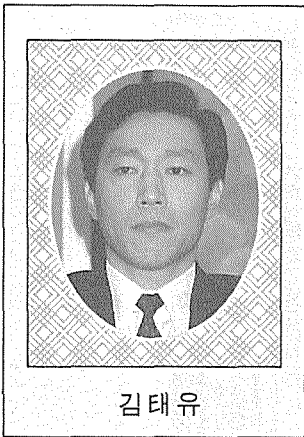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 일 시 : 1994년 12월 13일(화)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사 회 : 이 회성(에너지경제연구원장)
- 토론자 : ● 김 태유(서울대 공대교수)
● 최 철주(중앙일보 편집부국장)
● 이 복재(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
● 강 성철(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김 효성(상공자원부 석유기스국장)



이희성



김태유

○사회(이희성) : 토론의 순서는 제 왼쪽에서부터 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토론을 해주실 김태유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유 :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공과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태유입니다.

지금 앞서 이희성원장님의 석유산업환경에 대한 좋은 말씀과 강성철 부회장님의 석유산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김효성국장님의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늘 석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새로이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각론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총론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외가 떠들석했던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세계는 국경도 전선도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격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자율화시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의 과감한 축소개편이라는 삼성그룹의 장동차시장 진입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정

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듯이, 대외적으로는 현재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관주도 경제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훌륭한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산업이 완전경쟁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석유산업과 같은 에너지 자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론에서 이론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의 경우에 자율화가 산업을 효율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면 에너지자원산업, 석유산업의 경우에는 올바른 규제가 효율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산업이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증상은 같아도 처방은 각각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똑같은 정책의 여기저기 무차별적인 적용은 어린이가 배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모르고 무조건 적꼭지 물리는 우매한 보모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상이 있으면 병에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올바른 처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유가제도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훑어보면,

첫째로 가격기능이 악화되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됐다 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프전 당시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는데 국내유가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가 대폭증가가 됐었다, 이것은 국내유가가 시장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다. 그런데 만약 규제가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유가가 급등했을 것이고, 석유류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이 일어났을 것이고, 기업들은 석유확보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 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문제는 가격기능이 아니라 저유가정책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우리나라 석유소비가 년평균 17.6%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가가 전반적으로 저유가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는 한가지 이유로 에너지사업과는 전혀 불합리하게 저유가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걸프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계절적인 요인 등이 합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지만 결코 시장기능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종별 국제가격 구조는 변화하는데 국내유정별 가격구조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격구조는 수출입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결과는 낳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석유제품은 연산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상대가격은 소비구조상의 특성에 따른 문제이고, 유정별 제품가격의 차등 조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제품가를 단기적으로 만약 변동시킨다면 등유소비자와 같은 서민대중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대량 소비국에 정책변화나 소비구조의 일시적인 변화가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시시각각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정부규제로 인해서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가격조정요인의 누적을 일시에 조정해서 경제적 충격이 크다, 그리고 정유사의 손실보전 요소가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중질유분해리든가 탈황시설 같은 고도화 시설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을 진단해 보는데 이 원인은 경직화된 저유가정책과 정유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수익률규제라는 두가지 원인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원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경직된 저유가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를 완전히 자율화하고 그 다음에 정유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수익률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 하는 것은 마치 지붕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헐어 내버리겠다 하는 정책과도 같은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기전에 우리나라 석유사업 자율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김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안심입니다. 우선 추

진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잘 고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두번째, 설명하신 자료내용에도 다행히 이번 자유화 추진방향에 석유수급 및 가격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수출입법이나 등록요건에 대한 의무사항을 상당히 강력하게 부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경제주의를 유지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또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을 일단은 유보하고,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처방은 무엇이겠는가, 경직된 저유가정책이 잘못됐다면 유연한 고유가정책을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서 92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유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고유가정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연구로 발표도 하고, 보고서로도 쓰고, 학회에 가서도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학회지에 논문도 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규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요새 기업규제에 수익률규제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인 가격상한 규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원가에 석유수입가격의 변동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석유정책은 석유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변화, 소위 트렌드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시장의 실패」로 인한 국민복지의 상실을 방지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면 올바른 정책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화는 석유산업의 자원경제학적 특성상, 전에도 이러한 세미나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석유유통구조상 시장의 기능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개의 정유사를 가지고 완전경쟁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해서 이러한 자율화가 국민소비자 대중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화는 단가가격 등락에 소비자를 완전 노출시켜서 우리가 1차 석유위기를 맞이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한가지는 국민정서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가 지방이나 벽지 수요자가 비싼 에너지 가격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라는 이러한 일반경제학적인 원칙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언론도, 정치가도 유가자유화는 가격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가격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자유화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유가의 자유화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손해는 석유사업자가 담당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손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을 자율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정책은 제품의 수출입을 자율화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맞물려서 석유산업의 신규 진입과 신규증설을 모두 다 자율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 한가지를 규제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모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석유산업 자유화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또 프랑스도 EU에 가입하기 전까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확신없이 자율화로 돌진하게 되면 이것은 용기 보다는 망용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동자부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석유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걸프 사태의 위기를 그런대로 또 운이 좋아서 넘기 후에 상공자원부로 동력자원부가 통합이 되어서 3개국으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통상산업부의 한개의 실로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자원정책, 특히

에너지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부채를 낳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명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높아야 할 봉우리가 굉장히 높고, 깊어야 할 계곡은 깊기 때문에 이 산이 명산인 것이지, 그냥 높기만 하면 그것은 볼품없는 고원이고, 그냥 낮기만 하면 그것을 볼품없는 분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산업정책은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통한 시장의 기능 활성화가 우리나라를 2천년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명정책이 되도록 하려면 규제를 풀고 자율화를 해야 될 일반산업에 있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자율화해야 되지만, 이러한 특수한 에너지자원산업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규제를 도리어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이고 획일화된 자율화는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한 선진산업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구시대적 관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에너지가 인기있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를 봐도 「에너지」라는 문체가 여기저기 등장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라는 인기단어가 「환경」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자부는 한개의 실이 되고, 환경처는 환경부가 됐습니다. 물론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최우선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인체에 비유하면 만성병에 해당됩니다. 이 만성병은 결코 그 만성병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망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있는 여러분도 다 정밀검사를 해보면 조그마한 만성병은 가지고 계시고, 늙어가는 것도 만성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문제와 공존하면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문제는 급성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다가오면 우리 국가의 존망이 에너지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에 1차, 2차 에너지위기를 넘기면서 역사속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결코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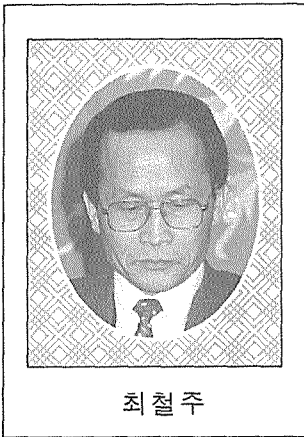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도, 언론도, 그리고 정치권도 이 세상에 에너지문제에, 석유문제를 경시하고 망각하는 이 때에 석유

협회의 세미나의 열기만은 아직도 예와 다름없이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올바른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석유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애착을 가진 여러분들이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석유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힘을 모아서 나서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 : 언제나처럼 김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토론자 분을 모시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최철주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최 철 주

○최철주 : 최철주입니다. 개발경제가 성장단계를 지나면서 각종 행정규제 완화의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논의가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산업체제 또는 보호체제의 속성은

개방체제가 논의될 때 아직은 시장개방 시기가 아니다, 또는 개방체제를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다 하는 여러가지 저항이 꼭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항이 만만치 않는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업계는 때로는 그 같은 세력을 끌어안거나 또 오로지 정책적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상 이외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자율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 시장규모도 따라서 넓어졌기 때문에 금융업도 발달되어야 된다. 발달됐어야 하는데 발달하지 못했기 때

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나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늦게 그러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아직은 후진국에서 조금 앞섰다고 하지만,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서둘러 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훨씬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부도 얘기를 하고, 업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WTO체제가 출범했고, 또 1년후에는 OECD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개방체제를 우리가 걸어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해 보면 외환정책도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얼마전에 발표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부문에서도 대학교육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몇년전, 몇달전만 해도 참으로 엄청난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정수준에 이른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도 자율화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학기도 융통성을 부여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육정책을 정부가 끌어안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국제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많은 장단점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저학들이 안고 있는 것이 아파트분양가격 자율화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의 자유화 방안이 다소의 이견이 여러 계층에서 있긴 합니다만, 그 선택의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유화 또는 자율화 만이 물론 우리 경제를 먹여살린다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속도에 맞추어서 자율화의 폭과 시행시기의 완급을 가리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공자원부가 국내 석유류제품가격 자율화 또는 원유나 석유류제품의 수출입자율화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8년전 또는 그 이전부터 정부차

원에서 검토가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가지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통제해온 유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자부가 상공자원부에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가자유화 계획을 세웠다가 늦어졌었고, 지금 일부 유정에 대해서만 가격자유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자유시장 경기에 원에 따른 정책수행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개개때 경제팀장이 들어설 때마다 그러한 원리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멍들기 시작한 것은 시장경제정책의 중심인 가격정책이 거꾸로 철지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어서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자율경영에 따라서 제품가격을 책정하라고 해놓고서 정부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조금 오르기만 하면 국제청을 동원하고, 시청을 동원하고, 보사부직원들이 나오고, 아마 기업하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의 문제가 생겼고, 품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휘발유의 경우는 좀 특이해서 업자들이 인하경쟁을 하는통에 세수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오히려 인하하지 말도록 보이지 않는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6공화국때는 정부가 서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일곱번이나 석유류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판단에 의해서 마치 인심이나 쓰듯이 석유류가격을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석유류가격이 왜곡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전소 지을 돈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전시설의 전력예비율을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율화건 시장진입이나 수출입 자유화건 간에 이제 이 제도의 시행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물론 따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과오레라고 볼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인 개방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석유가격도 자유경쟁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국내가격구조가 국제 석유가격구조라는 틀안에 들어가자면 석유류제품의 수출입자유화 조치도 뒤따라야 하고, 그래야 국내시장에서의

왜곡현상도 나타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3 또는 제4의 석유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유화체제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저 자신은 물론 갖습니다. 석유류제품이나 원유는 물론 안보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공공적인 성격을 띤 특수한 제품입니다. 쌀도 그렇습니다. 원유에 대해서 그러한 성격 때문에 석유공급이 관촬됐느냐, 만약 제3, 제4의 위기가 터질 때에는 그러나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간섭이 심할 때 석유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자유화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기에 위기를 맞는 것이 훨씬 코스트 지분이 적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긴급시에 정부의 간섭과 석유의 의무비축량, 기타 여러가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공자원부의 김효성 국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몇가지 궁금한 것이 39페이지를 보면 주유소와 대리점간 공급계약체결 의무나 이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폐지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리점의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리점이 여러 규정에 의해서 존립이 보장돼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폐지된다면 대리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어떤 과도기적인 시장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되면 석유공급업자가 유통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터인데,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습니까만, 유통시장의 판도나 경쟁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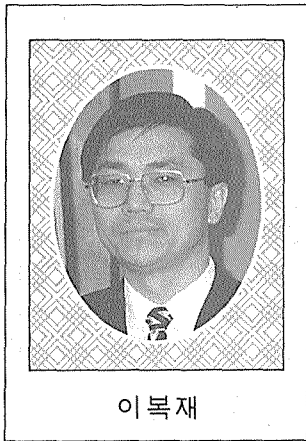
그리고 44페이지, 세번째 석유가격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석유가격체제하에서는 앞으로 경유등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터인데 소비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45페이지, 현물시장에 관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한국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현물시장으로서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사회: 두분의 토론자의 논지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요약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서에 간단히 적으셔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앞으로 보내주시면 세분의 지정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복재 : 저는 앞서서 토론하신 분들이 매우 전반적인 석유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각론쪽으로 특별한 이슈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개

념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저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나 주제발표를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규제는 나쁜 것, 또 정부의 규제가 없을 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씀은 하신 분은 한분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필요한 규제는 이미 없던 것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고, 단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는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가능한 한 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규제의 합리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규제를 무조건 철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오늘 정부가 제시한 석유산업 자유화의 방안도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짜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의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을 빌린다고 한다면 석유산업을 자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하는 질문이 그 다음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중에 국내석유산업이 처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내지는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전달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100퍼센트 동의하면서 거기에 더해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건도 변화했지만 국내석유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려서 국내석유산업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내지는 합리화, 자유화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완화나 자유화를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규제완화를 논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외국에 우리 국내석유시장을 개방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이냐를 다른 외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WTO니 하는 새로운 국제경쟁질서가 아닌 기존의 국제교역질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조강화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석유제품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나 합리화 또는 자유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화냐, 자율화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얼핏 보면 단어선택의 문제 아니냐 하고 넘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유화와 자율화는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유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자유방임의 의미가 상당히 무게있게 실려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자율화는 자기 스스로가 규제하고 있는 규율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오늘 석유협회의 정책세미나의 제목이 석유산업의 자유화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석유산업의 자율화가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왜 석유산업의 자율화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것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규칙이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앞서 여러분들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규제하던 규제를 폐지하든, 90년이 되든 2천년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최종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누군가는 달성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정부의 규제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그만큼 민간부문에 넘겨갈 뿐이지 그 짐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화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 만일 정부가 규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간다고 하면 이 짐은 이제 정부로부터 민간부문에 넘여가게 되는데, 민간부문이 이 짐을 성공적으로 지고 나갈 수 있으려면 말할 것도 없이 자유방임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규제의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간부문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입자율화를 한다 하면 이제까지는 정부가 수출입권을 허가를 해줬는데, 자율화되었을 때에는 아무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수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무나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권한을 선택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석유제품 소비자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해당 사업자에게 석유제품 수출입권을 부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이제까지는 라이선스를 줬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줬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고, 따라서 소비자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업권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국내의 석유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내석유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유정신이 많이 팽배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돈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투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것이냐? 그것이 자율화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그런 개념에

서 빨리 벗어나 소위 말하는 「청지기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로 「청지기정신」은 공간을 지키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공간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공간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내석유시장에 있어서 최종소비자들이 공간의 주인이고, 단지 공간의 주인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 열쇠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는 국내시장 석유공급자로부터 그 열쇠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자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개념의 바탕으로 해봤을 때, 오히려 이제는 스투어드쉽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자율화 내지는 자율화로 가고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시장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기업가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반 고려점을 바탕으로 해본다면 자율화보다는 자율화가, 과거에는 타율에 의해서 명에 매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스스로가 명에 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명에 잘 매고 가면 최종소비자로부터 우리 국내석유시장 공급자에게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낼 것이고, 그 신뢰와 사랑이 바로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고 보아서 자율화보다는 자율화가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의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몇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유가자율화의 시기선택 문제입니다. 아까 강성철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율화의 시기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자율화는 몇년 몇월부터 자율화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화의 시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점은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우선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유가의 단기적인 안정여건이 조성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유가를 자율화했을 때에 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은 별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유가를 자율화하자마자 올라가면 그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도변경을 받아들일지나 안받아들일지나 하는 것은 분명히 현

실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가의 단기적인 안정여건 조성이 돼 있느냐가 유가자율화의 시기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가자율화는 예를 들어서 금년 겨울철에 등유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다음 달에 휘발유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최종소비자가 매우 궁금해 하는 점이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최종소비자들은 10년, 20년 후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고, 어쨌든 안정여건을 갖추는 것이 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안정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저는 다음 두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의 정제능력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장능력이 어떠한지 하는 것입니다. 정제능력에 관한 한 현재 정유 5사들은 정부로부터 정제허가를 받아 정제시설 확장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제시설이 97년쯤 가면 우리 국내에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능력의 문제입니다. 저장능력에 관한 한 지금 현재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장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장능력이 미약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유가관리제도가 상당기간동안 일정수준에서 안정돼 왔기 때문에 저장능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금년초부터 정부가 유가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저장능력의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껴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정유회사들이 주요소비지에 저장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했을 때 매우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장능력이 단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가격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는 저장시설이고, 그 다음에는 정제능력의

가동율의 조절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능력의 확충과 저장능력의 확충이 단기적인 가격안정 여건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 연동제의 정착여부 문제입니다. 금년초부터 연동제가 실시되었는데, 연동제는 여러 분들에게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착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제가 금년 9월부터 다시 컨셉트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자율화로 가기 위한 큰 거보였다고 개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제를 시행한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의미중에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정부의 유가관리정책이 비용기준에서 시행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국내정유회사의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물론 원유도입가격도 포함합니다마는, 그런 비용기준에서 이제는 국제가격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유가가 더 이상 국내정유회사의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석유시장의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것은 국내석유시장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 큰 조치였다고 평가를 하고, 이런 새로운 조치가 새로운 개념전환을 통한 새로운 연동제가 불과 시행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착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연동제의 성공적인 착근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최종소비자들이 새로운 연동제하에서 별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율화니 연동제니 하여간 무슨 조치든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종소비자들이 득이 되어야 가만히 있지, 어떤 의미에서건 최종소비자의 포켓에서 단 10원이라도 빼내 갈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인식을 바로 연동제 시행기간동안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석유시장의 여건이 바뀌었을 때에는 국내유가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소비자들이 상당히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연동제의 성공적인 착근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러한 최종소비자들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국내석유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국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석유제품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에 아직은 익숙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장능력이 빨리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불안은 공연히 가격불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불안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단기적인 가격안정은 단기적인 수급안정으로 대처해야 되고, 단기적인 수급안정은 무엇보다도 저장능력 확충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능력 확충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통부문에 있어서의 저장능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정유회사들의 시설확장사업이 어느정도 완료여부가 중요한 고려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능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급자가격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정부의 가격관리 타개시 연동제의 시행기간 동안에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급자가격에서 소비자가격으로 가격관리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유회사나 유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이윤이나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공급자가격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국제유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였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희생되었던 것이 국내시장 석유공급자들의 이윤이었습니다. 국내석유시장 공급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내석유시장에서 종사하고 있고, 또 이윤이야말로 국내석유시장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석유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이윤을 빨리 정상화시켜 놓는 다음에 소비자가격을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동제 시행기간동안에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기존의 정제회사들의 정제시설 증설에 대한 허가제를

연동제 시행기간동안에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동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크게 거보를 내디뎠다고 표현해서 마땅할 정도의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래 정유회사에 대한 정산제도도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폐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유가자유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유가자유화 시기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책적인 고려점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유업의 신규참입과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의 시점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가격자유화와 함께 정유업의 신규참입과 수출입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단지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은 김국장님 자료에 있듯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추가적인 고려점이 있다고 한다면 석유제품 품질에 관한 문제는 물론 김국장님께서 시간 제약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불충분합니다마는, 석유제품 품질문제에 있어서는 수출입업자에게 품질보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석유제품품질은 국내석유시장에서 판매할 때 일정한 석유제품 규격이 있을텐데, 그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만을 판매하게 하고, 규격에 미달될 때에는 판매를 불허하는 품질관리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석유유통부문에 대한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에 관해서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주장되는 근본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가 주장되는 근본원인은 두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유소마진이 매우 낮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통채널이 크게 이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영채널과 자영채널이 있는데 직영채널과 자영채널간에 차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거래가 주장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거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 일차적으로는 주유소마진이나 유통마진을 적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첫째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직영채널과 자영채널간에 차별적인 거래는 빨리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채널과 자영채널간에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정유회사로부터 '갑'이라는 대리점이나 '을'이라는 대리점이 있다고 했을 때 '갑'이라는 대리점과 '을'이라는 대리점이 똑 같은 양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그 소비제품을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단계 더 내려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내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직영주유소와 그렇지 않은 독립계열의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도 똑 같은 물량을 판매하면서 거래조건은 달리 하는 그런데서 바로 직거래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영채널과 자영채널간의 차별성은 빨리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거래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불과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여건변화도 있고, 또 여건변화가 아니더라도 국내석유시장의 특히 유통부문의 구조강화를 위해서는 직거래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일 직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부문이 매우 영세합니다. 영세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압니다. 대리점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대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통부문 참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규모화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 말하는 대리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그 주유소가 대규모화된 여건하에서 정유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국내석유시장의, 국내유통부문의 구조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공급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직거래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따라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 시장참여자는 하고, 하기 싫고 현재 만약 유통 3단계계를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시장에 맡겨두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거래의 매우 큰 이유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주유소의 마진이 너무 낮기 때문이고, 소위 말하는 「더블마진」의 향유를 위해서인데 만일 시장에 맡긴다고 한다면 갖추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대리점기능 수행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더블마진」의 향유를 위한 직거래의 요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대리점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대리점기능의 위축은 제도 변경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수급이 안정될 때 최종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대리점기능이 일시에 위축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경우에 있어서는 정유 5사들이 공급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지만, 중소도시 내지는 농촌지역, 도서지역, 매우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의 석유제품공급에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정부정책이 목전의 문제만을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땅히 국내유통부문의 구조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내유통부문의 구조강화가 필요하고 구조강화는 대리점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대리점기능의 강화중에서 지금 미미하기 짝이 없는 저장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상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평상시 단기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거래문제는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통구조의 강화를 위해서 잘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민간비축 제도에 관해서 꼭 비축당사자가 비축시설이나 비축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제도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정부안에 이런 것도 있고, 협회안

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정부안이나 협회안에서 이런 비축물량이나 저장시설은 국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마땅히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개방의 문제인데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여건성숙을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까마는,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에 있어서 순서를 따진다면 저는 정유부문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유통부문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대외개방 순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유통구조가 현재 매우 취약하여 구조강화가 필요하고, 정유부문과 유통부문간의 연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연계관계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부문은 정유부문 후에 대외개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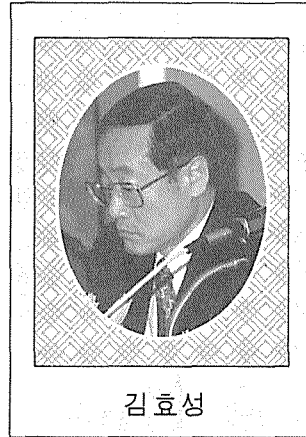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세분의 열띤 토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를 요약한다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자유화조치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먼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1년 내지 2년 뒤에 자유화조치의 실시효과를 평가하면서 1년 내지 2년 후에 대외적인 개방까지도 하겠다는 2단계 자유화조치고, 또 자유화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현재 허가제에서 일차적으로 등록제로 가고, 그 다음에 실시효과를 봐서 완전 자유화조치로 들어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석유국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앞으로 정부관계부처간의 협의나 또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자유화에 기본골격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언제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유화조치의 적정시기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허용하면 여러분의 의견이 개진됨으로써 정부가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큰 인풋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자 몇분께서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김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서 들어 온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김효성

○김효성 : 최철주 국장님께서 대리점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유소와 대리점간에 공급계약체결의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꼭 해라 하고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막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유통시스템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그것을 꼭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상황에 별로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대리점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현재의 대리점을 더 보강하여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저장시설 있다면 저장시설을 더 강화하여 민간 저장회사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송장비가 많이 있으면 수송전문회사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건변화를 평가하고 대리점들이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문을 표시한 것이 석유가격이 자유화되고 그런 가격구조들이 국제가격구조로 났을 때 소비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자유화되고 수출입이 자유화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격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휘발유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휘발유의 소비가 촉진되고, 또 산업용으로 쓰이는 B-C유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득이 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측에서 보면 득이 된다고 하겠지만 산업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면 그것과 반대방향의 현상이 나

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유교수께서 우리나라의 유가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저유가정책을 써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특소세를 조정해서 공장도가격 자체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특소세를 조정해서 너무 저유가정책이 유지되어 가지고 석유류의 소비를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당히 세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현물시장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국내시장의 완전자유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이 금년부터 석유의 순수입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쪽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내에서 정유공장의 신증설이 빨리 안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쪽을 본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현재 질문서가 모두 여섯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장은 연단에 계신 분들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세장은 석유국장님께 대한 것이고, 한장은 저한테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지명된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것은 유공가스의 서효중 고문님께서 주신 것인데, 질문내용은 에너지 상호간에는 환경규제와 편의성을 고려해서 BTU당 원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가격, 수입, 유통 또는 정제를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석유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석탄, LNG, 전력, LPG 등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석유류 외의 타 에너지의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는 한화에너지의 김수은씨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석유소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유산업의 현황과 과제중에 16쪽을 지적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GNP당 석유소비량 수준이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율이 낮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4년간 소비가 2배로 늘어난 1차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병행해서 시설투자 급증은 정유사의 투자부담을 가중시켜서 경쟁력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또 정유사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소하기 위한 대안중에서 석유소비량의 감소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럴 경우 이미 시설투자를 하여 놓은 정유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가지가 전반적인 코멘트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태유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유 : 먼저 두번째 질문해주신 한화에너지의 김수은씨 질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NP당 에너지 소비수준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당연히 석유소비도 높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하나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그동안 저유가정책, 에너지차원에서 에너지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물가차원에서, 경제기획원의 물가를 연말까지 몇퍼센트 이하로 잡아야 한다, 에너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이유로 저유가정책을 썼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도 비교적 에너지 낭비구조로 되어있고, 또 가정이나 일반 민수용, 산업용 수요도 단열재를 쓴다든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보다는 값싼 에너지를 대량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이유고,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단계상 아직 대량생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서구 미국 같은 나라를 전자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하는데, 대개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대량생산 사회에서 저부가가치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제품 GNP당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기술과 자본을 충분히 축적해서 선진국이 되면 고부가가치의 부피가 작고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 이러한 대량생산 사회를 계속적인 에너지공급으로 성숙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어떠한 국제적인 규제를 피해서 혹은 극복해서라도 대량생산 사회를 성숙시켜 선진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에너지공급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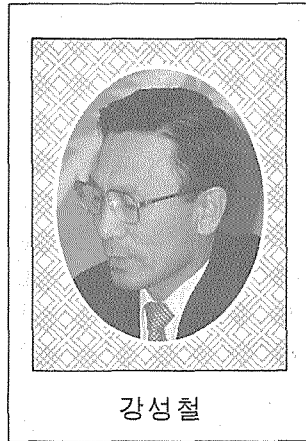
답변 치고는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 세계 제2차대전은 석유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공격이라든가 독일의 북아프리카와 코카서스지대의 침공 같은 것이 전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1차, 2차 석유 위기를 저의 자원경제학에서는 석유를 가진 선진국이 석유를 갖지 못한 중진국, 후진국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석유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뒤에서 이야기하는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그린라운드라고 얘기하는 탄소가스 발생량을 규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에너지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선진국이 기득권을 갖지 못한 후진국이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선진국이 되고, 도전자가 되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중후진국의 에너지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슬기롭게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서 대량생산 사회를 성숙시키는 방법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서효중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화를 하게 되면 다른 에너지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 안 드린 내용을 집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만큼 대체성이 강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쓰지 않으면 가스를 쓰게 되고, 가스를 쓰지 않으면 석탄을 쓰게 되고, 석탄을 쓰지 않으면 전력을 쓰게 되고, 이렇게 대체성이 강한 상품 한가지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엄청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석유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 전체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화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취지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철

○강성철 : 우리 석유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가 많이 팔리면 좋겠죠. 되도록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나 실제로 많이 팔아야만 이윤이 많이 남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가 한방울도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교수께서 잘 지적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과소비가 되고 있는 것은 저유가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저유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는 분들은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름값이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돌리고 또 자가용 가진 분들은 기름이 싸니까 계속 시간만 있으면 놀러다니고 이런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유가정책이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좋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유가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공가스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협회에서는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우선 유공가스에서는 나오는 LPG는 민생연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유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자유화하느냐 시차를 두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당국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원간 같이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 국장님, 이 시점에서 석유수요 억제대책이라는 것이 마련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성 : 저는 소비증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중에 우선 저유가정책에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우리 산업구조가 너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이 제1기 준공이

된 것이 73년인데, 20년만에 100만톤에서 지금 2천만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20배 이상의 철강 생산을 가져왔고, 시멘트 생산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유리 같은 산업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산업들이 성장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일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또 가정에서는 그 동안에 연탄에서 석유로 대체되면서 가정용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높은 증가율이 계속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본의 예를 보아 오래도록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산업계에서 인식하고, 그래서 증가율 자체는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겠으나 증가율 자체에 신장율은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겠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PG와 LNG 문제는 당초에 저희도 검토할 때 LPG도 자유화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PG는 LNG와 같이 맞물려 있고 더군다나 LPG가 서민용 연료라는 인식 때문에 LPG를 지금 당장 자유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LPG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수요의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급해주는 국가는 사우디가 거의 다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독점성이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전력, 석유, 가스의 대체성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경쟁관계에 있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라든지 시간이 많이 필요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간의 경쟁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 : 최부국장님, 지금 두가지가 일반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소비량이 너무 높아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여타 에너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석유만의 가격자유화라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한 것이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철주 :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쪽에서는 석유제품 이외에 LPG는 역시 공급쪽에 독점적인 체제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직은 그럴 체제가 못된다 라는 것,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체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에너지 상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하는, 역시 김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의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정부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재 :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유가만 자율화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말씀중에 에너지원간의 대체성에 상당히 원활하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있는데, 물론 에너지원중에 일부 에너지원간에 대체성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체연료간에, 유체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체연료인 석유와 기체연료인 LPG나 LNG의 유체연료내에서는 왔다 갔다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용이할 줄 모르겠습니다. 유체연료와 고체연료간에는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기술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에너지 이용기기를 대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대체성이 좀 더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LPG나 LNG는 대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체연료만을 분석으로 대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LPG나 LNG는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하고 있고 석유제품만 가격을 자율화시킨다고 한다면 국내석유시장의 석유제품 공급자들은 함부로 가격을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한선은 어디겠느냐, 그 상한선은 이 경쟁연료가 되는 LPG나 LNG의 가격이 상한선이 되지 않겠나, 그 가격 이상으로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으로부터 다른 LPG나 LNG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석유제품 공급자들은 함부로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은 프라이스실

링 역할을 LPG나 LNG가격이 해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저의 하나의 포인트고, 또 다른 포인트는 석유가격을 자율화시킨다고 한다면 LPG나 LNG도 자율화시켜야 맞는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해주셨는데, 매우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건이라고 보고, 그것에 더해서 추가적인 고려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려점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LPG나 LNG에 관한 한 요즘 특히 공급상에 있어서의 안전의 문제가 큰 이슈로 되어 있고, 또 안전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용기로 배달하는 LPG도 있습니다마는, 파이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급의 안정성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최종소비자들이 매우 염려하는 것은 금년 겨울 LPG값이 어떻게 되느냐, 내년 봄의 LPG값이 되느냐,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변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저장능력을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LPG 저장능력을 확충시키는 방법이고, 또 공급원을 다원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김국장님 말씀대로 공급원이 그렇게 널리 퍼져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일 공급국이 다원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제한된 공급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는 데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내에는 LPG 수입사가 2개사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LPG가격을 자율화시키면 2개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석유산업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를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폐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은 아무리 시장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안전만은 정부가 고유하게 시장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따라서 결국 공급의 안정성이 LPG가격의 자율화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LPG가격의 자율화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접근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한 것이 석유과소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앞서서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유가수준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결국 소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물론 유가 하나만 가지고 모든 소비자의 행태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석유 소비의 과소비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석유제품에 대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과금을 더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데,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빨리 해주어야 할 것은 국내석유시장의 참여자들의 이윤을 적정화시켜 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적정화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진을 가지고 정부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접근방법이 과소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력과 LNG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독점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시장자유화 조치는 고려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석유소비는 최근에 들어와 상당히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지금 우리가 석유소비의 수요추세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석유국장님께 정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인데, 석유유통협회의 서울지 부회장님께서 계시는 박재원회장님 질문입니다.

상표표시제도는 품질관리 유통질서 확립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국장님의 발표내용중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쌍용정유의 선진영씨께서 하셨는데, 석유제 등록시와 또 수출입등록시 각각 총정제능력의 60일분 또 수입량의 60일분의 저장시설 보유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분까지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수출이 우리나라 여건에서 국가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순수입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세번째는 석유유통을 자유화시켰을 경우 가격파괴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앞으로 탄소세의 도입이 있을 것인데,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정유회사와 정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김효성 : 첫번째 질문하신 상표표시제 문제는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계속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일 모든 부분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공정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상표표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장시설보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국제현물시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국내에서 비상시 대비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지 왜 수출까지 저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회사의 수출물량을 빼주느냐 안빼주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을 자유화해서 가격을 자유화했을 경우에

가격파괴라고 할까, 경쟁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 정유사들의 손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정부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했으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도 그렇고,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초기에 나타나지만, 자연적으로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에 리딩회사가 한두개 정도 있어서 그 회사의 가격을 따라가는 그래서 점차 안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과열되어 소비자들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든지 보일러를 때는 분이 등유를 얻을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정부는 이런 쪽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에 탄소세는, 아까 김태유교수도 지적을 하셨습니까마는,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규제의 강화하고 저희 상공자원부하고 상당히 환경처하고 관계가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쪽에서는 그런 쪽의 규제, 부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너무 이쪽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도 가입되고 그랬으니까 부담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그러한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으로 질문서 하나만 해결 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 발표자들께서 마지막에 마감하는 말씀을 1분 정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맨 끝의 질문서는 제가 한 발표내용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한국의 재벌체제를 고려할 때 유통부문에서의 정제시설 확장경쟁을 통한 공급과잉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조정 또 시설확장등 진입제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정유의 김정래씨가 하셨습

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벌체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가지 한국적인 경쟁형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제 발표문 뒷부분에 가서 나타는 바입니다마는,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체제의 투자형태가 UR이나 다른 새로운 경쟁질서를 감안해 볼 때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벌체제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경쟁적인 행태는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안은 원인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끝으로 1분 정도씩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서 마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복재 : 저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론의 모두에서 제 나름대로 강조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아니라 자율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석유시장 참여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사업권은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받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라이선스다. 따라서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석유산업이 자율화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부여한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규율에 입각해서 석유산업을 운영해 나갈 때 그 석유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철주 :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자율화정책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석유가격 또는 석유류제품의 수입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몇년후에 정부가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김효성 : 그동안 정부가 석유산업에 대해서 자유화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시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대개 생각한대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까 제

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담당자들이 토론을 거치고 전문학계라든지 또는 업계의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는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차례 정도 더 의견을 광범하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런 여론수렴 과정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철 : 자유화, 이것이 자율화가 됐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업계만의 일이 아니고,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나 또 소비자, 여러분야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화해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 지금 김국장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유화 시점이 어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를 거쳐서 자유화하기 때문에 이 자유화하는 과도기 기간동안에 지금까지의 우리 정유산업이 컸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끝까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시기를 적절히 택하고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일이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업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의된 내용이 국장님께서 정책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토의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유 :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좋은 석유가격은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니고, 시장경제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는 가격도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가격의 폭락과 폭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를 막아서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파괴적 경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격, 그러한 가격을 만드는 정책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